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서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2면	"소양강댐 주변지 활성화 주민 의견 반영돼야"	1
江原日報	02면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검토해야”	2
KBS 춘천	온라인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 포럼 열려	3
江原日報	02면	국립강원과학관 오늘 착공	4
江原日報	11면	영서고 출신 6·25참전유공자 명비 제막	4
江原日報	21면	“어려운 이웃 보듬는 사랑의 나눔 함께 펼쳐요”	5
江原日報	10면	홍천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5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태백 풍력발전소 현장방문	6
江原日報	21면	강원자치도의회 기행위 의정연찬회	6
강원도민일보	22면	"농업 미래산업 발돋움 도-후계농업경영인 지혜 모아야"	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강정호.홍성기.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7
江原日報	01면	'itx-마음' 혜택만 보는 경기 손실보전 홀로 떠안은 강원	8
강원도민일보	02면	태백선 운행 ITX-마음 노선 양평 양동역 끼워넣기 논란	9
江原日報	01면	도내 청년실업률 전국 최상위권 '대책 시급'	9
江原日報	02면	강원산림엑스포 목표수익 절반 넘었다	10
江原日報	07면	강원 기업 99.9%는 中企	10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청년 '숙박·음식점업' 취업쏠림 심화… 고용불안 높아	11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광역지자체 첫 시행 주목	11
江原日報	02면	동해 수소생산기지 산자부 공모 선정	12
강원도민일보	05면	따뜻한 겨울 탓 해충 부화율 꺾춤 "폭염에 약 칠 시간 부족"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창업 생태계 조성 속도 내야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자체 역량 길러야만 중앙통제 벗어날 수 있다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동해안 수산물 홍보행사, 소비 촉진 돌파구 되기를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문화시설 협약해놓고 5년째 무소식이라니	16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02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와 강원연구원은 28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등을 논의했다. 서영

“소양강댐 주변지 활성화 주민 의견 반영돼야”

공동대책위·강원연구원 주최 포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제기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등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영)와 강원연구원은 28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공동대책위는 도의회와 춘천·양구·인제·화천

지역 기초의회의원으로 구성돼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대책을 위한 수당’에 대해 발제에 나선 김문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댐 주변지 지원사업은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구조라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렵다”며 “주민 참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지원사업단 설립,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설치, 사업시행자 지자체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발제에서 “충주댐, 대청댐 등 댐 주변지 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다”며 “일본의 경우, 댐마다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반드시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권혁열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소양강댐으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진권 원장은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많은 희생을 받아왔다”며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무철 도의원, 박제철 춘천시의원, 신철우 양구군의원, 김재규 인제군의원, 진장철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영근 법과기술포럼 등이 참여했다. 이설화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 포럼이 28일 강원연구원에서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이무철 도의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춘천·화천·양구·인제지역 시·군의원,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렸다. 신세희기자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검토해야”

활성화 포럼서 제기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 소득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8일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 포럼’에서 김문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단순히 인구

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댐 주변 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의견 수렴과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추후 지원사업비 확보, 댐 주변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댐별 지원금 산정 기준은 비합리적이고 근거가 없다”며 “댐에 대한 가치와 이용 목적을 재설정하고 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지역 발전,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소양강댐 피해지역 도·시·군의원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책위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영(대책위원장)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댐 주변 피해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대책위가 댐 주변지역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2023 08 28 ()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 포럼 열려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강원연구원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활성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는 강원도의회를 비롯해 춘천·양구·인제 시군의회의 의원들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댐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 기준 등 제도적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원금 배분 기준 개선과 주민 의견 수렴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엄기숙

江原日報

2023 08 29 ()

11

江原日報

2023 08 29 ()

02

국립강원과학관 오늘 착공

군사도시를 상징했던 원주 옛 캠프 부지가 문화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하는 첫발을 뗀다.

원주시는 29일 오후 3시 원주 태장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에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이하 강원과학관) 착공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김기홍 강원자치도의회 부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강원과학관은 국내 최초의 생명·의료 전문 과학관으로, 과기부가 공모한 국내 1호 전문관이다. 옛 캠프 내 부지 2만4,000㎡에 지상 3층, 연면적 7,005㎡(전시공간 2,833㎡ 포함) 규모로 국비 244억원 등 총 409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허남윤기자



◇강원서부보훈지청과 영서고는 28일 학교에서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박길선 도의원, 김근덕 고엽제전우회 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을 했다.

영서고 출신 6·25참전유공자 명비 제막

【원주】6·25전쟁 당시 참전한 영서고(옛 원주농고) 출신 참전유공자들을 기리는 명비가 건립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과 영서고는 28일 학교에서 최미옥 원주시의회 부의장, 박길선 도의원, 박문근 시의원,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강신 36사단 제108보병여단장 등과 김근덕 고엽제전우회 도지부장 등 지역 보훈단체장, 차부환 영서고 총동문회장 등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유공자 명비 제막식을 했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감사편지 및 헌

시 낭독, 참전용사 호명, 테이프 커팅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특히 신재규(6회 졸업생), 심상은(7회), 정영시(8회)씨 등 영서고 6·25참전유공자 3명도 직접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명비에는 국가수호를 위해 군인, 학도병 등으로 참전,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영서고 출신 88명의 참전유공자 이름이 새겨졌다. 학교와 동문회는 명비가 위치하는 정문 주차장 옆을 소공원으로 조성, 호국보훈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설영기자

“어려운 이웃 보듬는 사랑의 나눔 함께 펼쳐요”

제6회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
춘천 근화동행정복지센터서 개막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가 손을 잡았다.

“2023년 제6회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이 28일 춘천시 근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나눔팔레트의 막을 올렸다. 창간 78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춘천MBC, (사)사랑나눔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에 이어 올해부터 공식 후원기업으로 활동하게 된 K-water 소양강댐지사와의 협약식 등이 진행됐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올해도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눔팔레트를 통해 모인 도움의 손길들은



◇2023년 제6회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 개막식이 28일 춘천시 근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기관인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종규 춘천MBC 사장, 이수형 (사)사랑나눔 대표이사를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등 내빈과 K-water 소양강댐지사를 비롯한 후원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여러 이유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규 춘천MBC 사장은 “지난해 행사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다양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행사가 잘 될 것 같다”며 “춘천이 다른 타 도시보다 세대 간의 격차가 적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춘천

MBC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수형 (사)사랑나눔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기반으로 나눔 문화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후원기관인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은 따뜻하고 배려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며 “양극화, 빈곤, 소외 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 더 귀담아듣고, 더 노력해 춘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병국 K-water 소양강댐지사는 “올해로 소양강댐지사가 50주년을 맞이했다. 지역사회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막식에는 허영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김희철 도의원, 유계식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경애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 신영길 춘천시주민자치협의회장, 박재호 춘천북부노인복지관장, 허미숙 소양강댐노인복지관장, 김소영 춘천남부노인복지관장, 김중세 춘천동부노인복지관장, 김영배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이종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조합장, 임기수 한국타이어 춘천대리점 대표,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홍천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 ‘홍천 화촌면 야시대리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제’가 28일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추모공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장, 홍성기 도의원, 김광식·용준순·용준식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22

江原日報

2023 08 29 ()
21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태백 풍력발전소 현장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태백가덕산 풍력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의정 연찬회를 가졌다.



강원자치도의회 기행위 의정연찬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등 태백시와 영월군 일원에서 의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22

“농업 미래산업 발돋움 도-후계농업경영인 지혜 모아야”

원주서 후계농업경영인 도대회
우수농업경영인 60여명 포상
내일까지 지역견학·체육행사 등

제17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특별자치도 대회가 28일 원주 댄싱공연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막했다. 대회는 오는 30일까지 원주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의 슬로건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와 함께'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후원했다.

첫째날인 28일 열린 개회식에는 이학구 한농연 중앙연합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제17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개회식이 28일 원주댄싱 공연장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재용 원주시의회위원장, 심창보 한농연 도연합회장 등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재근 도연합회 감사, 안영호 강릉시연합회장, 조창목 양구군연합회장, 이성기 양양군연합회장, 박상용

원주시연합회 수석부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수상하는 등 60여명이 우수농업경영인 포상·상장을 받았다. 대회는 29일 원주지역 역사문화관광지 견학, 체육행사·노래자랑이 진행되며, 30일 폐막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심창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도연합회장은 “농업경영인으로서 사명감을 높이고 신규 후계인력의 가교역할을 실현해 농촌 리더로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돋움시키고 농촌을 매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도와 후계농업경영인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명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16

강정호(속초) 도의원
은 29일 오후 2시
속초 근로

자종합복지관에서 열
리는 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관련 시민토
론회에 참석한다.

2023 08 28 ()

江原日報

[동정] 강정호. 홍성기.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강정호 도의원(속초)은 29일 오후 2시 속초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속초시
신청사 건립부지 선정 관련 시민토론회에 참석.

홍성기 도의원(홍천)은 29일 오후 2시 도청 제2별관 6층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의실에서 열
리는 산림분과 워킹그룹 3차 검토회의에 참석.

전찬성 도의원(원주)은 29일 오후 3시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에서 열리는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착공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8 29 ()

01

‘itx-마음’ 혜택만 보는 경기

〈서울~태백·동해 준고속열차〉

손실보전 홀로 떠안은 강원

道-5개 시·군 매년 15억 지급... 경기는 부담 제외 논란
양동역 뒤늦게 추가·감속운행 겹쳐 시간 단축 효과 미흡
김 지사 “경기지역 정차역 1~2개 줄여야” 코레일에 건의

속보=9월1일부터 폐광지역을 운행하는 준고속열차 itx-마음(본보 28일자 1면 보도)이 경기 양평 3개역에 정차하지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폐광지역 시·군만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운행 초기 서울~태백 간 3시간대, 서울~동해는 4시간대 저속운행이 불가피한 만큼 강원자치도는 경기지역 정차역 축소를 코레일에 건의했다.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명명식·시승식 등을 개최한 신형 준고속열차 itx-마음은 9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 청량리역~경기 양평~용문~양동~강원 원주~충북 제천~강원 영월, 정선 사북(민동산역), 태백, 삼척 도계, 동해 등을 일일 2회(왕복 1회) 운행한다.

당초 강원자치도는 준고속열차 도

입 시 서울~폐광지 2시간대 주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당분간은 태백 3시간5분, 도계 3시간32분, 동해 4시간17분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태백선 무궁화호와 비교했을 때 36분 정도의 운행 시간 단축을 기대했으나 절반에 그친 셈이다.

itx-마음은 시속 150km까지 주행할 수 있지만 운행 초기 안전을 위해 평균 시속 70km로 감속운행 예정인데다 경기지역 3개역을 정차하며 운행 시간이 다소 늘었다. 특히 경기 양평 양동역은 정차 계획이 없었으나 경기지역의 요구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자치도와 itx-마음이 정차하는 강원지역 5개 시·군은 연 15억원 가량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3개역에서 정차하는 경기지역도 같이 혜택을 받지만 손실보전금은

내지 않는다.

철도산업법 제32조는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태백선 준고속열차 도입을 강원지역에서 요구했다는 점, 경기지역은 탑승률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강원지역만 연 15억원을 내게 된 것이다.

강원자치도는 주민 혈세로 연 수십억원의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만큼 강원지역에 보다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의 정차역을 줄여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코레일에 전달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남부권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경기도에 정차역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지역은 다른 열차편도 많다”면서 “양동역에 추가로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 경기권에서 정차역 1~2개 정도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02

태백선 운행 ITX-마음 노선 양평 양동역 끼워넣기 논란

연간 15억원 손실보전금 지급
도·5개 시군 형평성 문제 제기
코레일과 정차역 재검토 계획

속보=내달 1일 정식 개통(본지 8월 28일자 1·3면)되는 태백선 ITX-마음(청량리~동해역) 열차 노선안에 기존에 없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동역이 추가되자, '노선 끼워넣기' 논란이 일며 강원도와 도내 5개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태백선에 해당 노선이 운행됨에 따

라 도내 노선 관통 지자체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연간 손실보전금을 15억원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권역 역사가 사전 협의없이 추가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시속 150km 준고속열차의 속도 제대로 살리기 위한 '노선 개선'이 과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경기권역 역사가 추가된 상황이어서 도는 추가 정차역 재검토·노선 시간표 조정 등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신규 준고속열차인 ITX-마음은 한국철도공사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태백선

에 총 5편이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원도와 도내 5개 시·군은 강원남부지역의 시급한 교통망 개선을 위해 해당 열차 1편을 9월 1일부터 조기 도입하는 것으로 철도공사측과 최종 협의를 이뤘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와 강원도는 청량리에서 출발해 양평과 용문, 원주, 제천에 이어 태백선(영월~민둥산~사북~태백선~도계~동해선)으로 이어지는 노선안을 확정했지만, 철도공사측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동역을 추가한 열차 시간표를 이날 중순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도권 정차역 추가에 강원도와 태백시·동해시 등 강원남부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실보전금까지 부담하며 추진한 지역 숙박사업에 되려 수도권이 무임승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28일 "강원남부권 소외지역에 숙박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정차역을 늘리려고 하나, 원래 있던(정차역)을 더 줄였으면 하는 마당에 양동역이 추가로 들어간 것을(ITX-마음 명명식 행사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는 정차역 폐지, 운행 시간표 조정 등을

ITX-마음의 운행 속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운행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 양동역 정차역 폐지, 운행 시간표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강원도와 도내 5개 시·군(동해시·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은 ITX-마음 도입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연간 손실보전금 15억원을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한다. 당초 철도공사측은 해당 태백선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라는 이유로 연간 손실보전금 59억원을 요구했으나, 도와 시·군은 보전금 인하·윤충수입금 정산 등을 관철시켜 15억원까지 낮췄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 08 29 ()
01

도내 청년실업률 전국 최상위권 '대책 시급'

작년 '상반기 9.5%' 두 번째·'하반기 7%' 세 번째로 높아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실업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생 고성장기업 육성, 청년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29세) 고용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실업률은 상반기 9.5%로 전남(10.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하반기에는 7%로 울산(10.9%)·부산(7.6%)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경총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비중이 높은 강원지역의 경우 해외 여행 재개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 변동으로 여행·관광업 실적이 등락하며 실업률도 변동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의 경우 20대 초반(20~24세) 실업률이 특히 높았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청년고용률 1위가 수도권인 아닌 제주였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실제 도의 지난해 상반기 20대 초반 실업률(17.5%)은 전국 평균(8.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경제활동 하지 않은 도내 20대 후반 청년의 20~30%가량은 별다른 활동 없이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 20대 후반 청년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었음' 비중은 상반기 5,000명(23.9%), 하반기 7,000명(30.3%)에 달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역 맞춤형 청년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통합 고용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현정기자**

강원산림엑스포 목표수익 절반 넘었다

개막을 24일 앞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계의 응원과 지지가 커지고 있다. 벌써부터 기업과 기관들은 물론 출향도민까지 후원과 지원 등에 힘을 보태면서 목표수익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출향도민들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서포터즈를 자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민회중앙회와 각 시·도 강원도민회원들은 28일 입장권 3,000매의 예매를 마쳤다. 다음 달 22일인 개막일까지 목표인 총 5,000매를 채우고, 추가 모객에도 앞장선다는 목표다.

김천수 강원자치도민회중앙회

내달 22일 개막 앞두고 각계각층 후원·기부 쏟아져
출향도민 모객 앞장... 조직위 수익 74억 중 41억 확보

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강원도의 가장 큰 자원이자 자랑”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의 바람직한 산림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관람객에게 강원도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출향도민들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최수천)과 북부지방산림청(청장:임하수)도 이날 입장권을 각각 2,000매씩 구매 약정했다.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의 목표수익은 74억원이지만 이미 41억8,300만원을 확보했다.

주목할 점은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각계의 후원과 기부가 18억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당초 후원 목표액은 7억원가량이었으나 각계의 관심으로 이미 두 배를 뛰어넘었다. 입장권 판매수익은 현재 6억원대로 예매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조직위는 설악산 단풍관광객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격적인 티켓 세일즈로 대회 흥행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또 각 시·군이 입장권 사전 구매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초·중·고교생 1만5,000여명의 단체 관람도 추진 중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고성 세계캠버리수련장에서 9월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펼쳐진다. 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등의 전시관이 운영되고, 다양한 체험, 공연도 마련된다.

전진표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개막을 3주 앞두고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림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무현·최기영기자

강원 기업 99.9%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총 23만3,637곳 집계 역대 최고치 경신
연 매출 55조원 전체 84.6%... 지역 경제 기반 입증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이 23만개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9.9%를 기록, 강원 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으로 존재감을 입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도내 중소기업 수는 23만3,637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2만1,385개) 대비 5.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2015년 18만2,222개에 불과했던 도내 중소기업 수는 2018년 20만3,550개로 처음 20만개를 넘

긴 데 이어 2021년 23만개를 돌파하며 과거 기록을 갈아치웠다.

도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47만5,366명으로 2020년 말(45만1,115명)과 비교해 5.4% 늘었다. 중소기업 수와 종사자 수가 도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이다. 중소기업 비중은 99.9%, 종사자 비중은 94.4%에 이르렀다.

도내 중소기업 매출액은 2020년 49조4,188억원에서 2021년 55조32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전체 기업 매출액(64조9,948억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4.6% 수준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원주, 강릉, 속초,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양 등 9개 지역은 중소기업 비중이 100%에 근접했다. 특히 양구의 경우 기업 수, 종사자 수, 기업 매출 모든 부문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비중이 100%로 지역경제를 온전히 떠받치고 있었다.

최선운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지역에 자리 잡은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독립성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강원청년 '숙박·음식점업' 취업쏠림 심화...고용불안 높아

지난해 하반기 17.6% 차지

계절·경기상황별 실업률 영향

고성장 기업 양성 필요성 대두

속보=강원지역 20대 10명 중 4명은 미취업 상태(본지 8월 28일자 6면)인 가운데 강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업종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경제기자총협회에 따르면 강원지역 지난해 하반기 강원지역 청년고용률은 40.9%로 상반기(38.7%)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17개 행정구역 중 11위 수준이었다. 강원지역 청년 최다 취업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상반기 16.7%(1만5000명)에서

하반기 17.6%(1만6000명)로 비중이 0.9%p 늘었다. 이는 음식 및 숙박업이 많은 강원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총은 보고서를 통해 여름·겨울철 리조트, 스키장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은 계절별, 경기상황별 변동이 높아 강원지역 청년 실업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강원지역 청년 상반기 실업률은 9.5%로 전남(10.3%)에 이어 2위에 올랐고, 하반기도 7.0%로 울산(10.9%), 부산(7.6%)에 이어 최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의 청년실업률은 상반기 17.5%로 전국 평균(8.1%)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하반기도 9.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계다가 하반기 20대 후반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된 사유 중 '쉬었음'이 7000명(30.3%)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노동시장참여가 어려워져 실효성 있는 고용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고성장기업과 신생 고성장기업(가젤기업)에 대한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강원지역 고성장 기업은 95개로 전국(4995개) 대비 1.9%에 불과했다. 가젤기업도 20개(1.4%)로 1%대 머무르는 등 가젤기업양성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경제기자총협회 관계자는 "강원지역이 주소지 이전취·창업 청년에 대한 정착비 지원 등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며 "온라인 청년센터팝업 안내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우진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이라 써진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김정호

강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광역지자체 첫 시행 주목

사업소 등 적용 내년까지 설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청 등 강원도내 공공기관에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가운데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도청은 청내 주차장에 파란색 바탕 주차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이라고 쓰

여진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최재민)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현재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16곳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에 선도를 비롯해 속초시, 원주시 등 지자

체 2곳이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지난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도청의 출장소와 사업소, 도립화목원"이라며 "내년까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해당 기관에 설치한다"고 했다.

이설화lofi@kado.net

2023 08 29 ()

02

江原日報

동해 수소생산기지 산자부 공모 선정

道 제2청사 개청 후 첫 성과... 국비 128억 확보

강원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도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은 제2청사 개청 이후 영동과 남부권의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첫 번째 공모 사업에 선정돼 128억4,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제2청사 개청 후 첫 공모 선정 및 국비 확보 쾌거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3년간 동해시 구호동 북평산업단지 일원에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발전전력을 연계시켜 수전해 기술을 활용, 하루 1톤의 그린수소를 생

산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동서발전(주)으로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수소생산기지 운영 등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대우건설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과 출하설비를 구축한다. 제아이엔지는 수소생산기지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다.

강원자치도와 동해시는 인허가 및 수소 활용처 발굴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곽일규 도글로벌본부미래산업국장은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확충을 통해 강원자치도가 청정수소생산 거점 기반을 선점,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05

따뜻한 겨울 탓 해충 부화율 꺾중 "폭염에 약 칠 시간 부족"

자규 열대화 시대 강원도가 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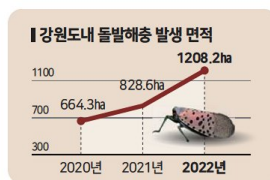
4. 이상고온에 돌발해충 극성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돌발해충도 극성이다. 이미 강원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현실화 된 가운데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춘천시 동내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송호진(43)씨 농가에서는 최근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계속된 폭염으로 방제기간이 줄면서 돌발해충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 송씨의 복숭아 밭에는 4가지 품종의 복숭아가 있는데 수확하는 시

도내 미국선녀벌레·꽃매미 등 돌발해충 발생 면적 매년 증가
고온에 빨리 익은 과수 방제 놓쳐
"기온 높을수록 알 낳는 횟수 ↑"

기가 차이가 나다보니 그 기간에 맞춰 방제약품을 2~3차례 도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복숭아가 예정보다 빨리 익어버리는 탓에 방제약품을 1차례밖에 도포하지 못했다. 송씨는 "돌발해충이 밭에 나타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방제를 할 시간이 없다보니 돌발해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확을 앞두



고서는 약을 치지도 못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내 돌발해충 발생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춘천과 원주에서 최초 발생한 꽃매미와 2012년 원주에서 발견된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2020년 664.3ha 규모에서 발생했지만 2021년 828.6ha, 2022년 1208.2ha 등으로 늘어났다.

돌발해충이 증가한 이유는 이상고온 탓이다.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돌발해충의 알이 죽지 않고 부화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농기원이 올해 초 춘천과 고성 등지에서 겨울동안 월동한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의 난괴를 수집해 부화율을 조사한 결과 갈색날개매미충은 80.5%로 전년보다 25.9%p 증가했다. 지난 겨울은 전년보다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최저기는 경과일수가 9일 적었고 2~3월에는 반대로 기온이 높아 부화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돌발해충과 기온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정종국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대발생 생물대응 워크숍'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정종국 교수에 따르면 지난 3~5월 대벌레알 4500개를 고도 100m 마다 배치한 결과 고도 100m에서는 30%만 부화율이 500m에서는 5%로 떨어졌다. 보통 고도가 100m 높아지면 기온은 0.65도 내려가는데 벌레는 겨울 기온이 따뜻할수록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종국 교수는 "곤충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돌발해충의 경우에도 기온이 높을수록 알을 낳는 횟수가 늘거나 부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언제든지 지금 확인되지 않는 돌발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 19

창업 생태계 조성 속도 내야

-민간일자리 비중 전국 최하위, 돌파구 마련을

강원지역 민간 일자리와 평균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환경에 따라 지역간 일자의 양과 보수의 편차도 심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이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이 가속할 전망이다. 강원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자생 기업을 늘리기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은 창업에 적합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5월 기준 강원지역 경제활동 인구 대비 민간 일자리 비중은 37.4%로, 전국 평균인 45.4%를 하회했습니다. 전국 17개 행정구역 중 1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업 비중이 25.6%로 전국 평균인 7.1%보다 높습니다. 민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공공 발주에 의존한 점을 감안하면, 순수한 민간 일자리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평균 임금도 262만원으로 전국 평균 297만원 대비 35만원 차이가 났으며

제주다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고용확충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유치도 여의찮은 실정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창업환경 조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라북도와 한국벤처투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84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벤처 기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창업 환경 조성은 다방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과 첨단산업은 물론, 중소 규모의 자생력 있는 향토기업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업과 요식업 숙박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통시장과 구도심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등 특정 세대에 한정해서도 안 됩니다. 중장년층과 은퇴자들도 뛰어 들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8 29 ()

/ 19

지자체 역량 길러야만 중앙통제 벗어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초정보화 사회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우리 사회의 상식이 돼 버렸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출이 증가하고 세입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현상 진단 자체는 이젠 진부하다고 할 정도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과연 자치단체의 자치를 강화한다고 해 지금의 세출 증대와 세수 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집권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시켜 분배의 논리를 키우는 것이 타당한지 등 논의

가 분분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집권-분권적 주장이든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대안 모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분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더욱 그렇다.

정치권 안팎에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재정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람도 없는 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이 왜 필요하냐는 말까지 나온다. 지방자치 회의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스럽다. 특정 기관, 자치단체의 잘못을 따지기 전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 없이 손가락만 얹어 놓은 사공이 많았다는 데 있다. 자치단체의 방만 운영과 무책임함이 우려되면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 자치단체

가 스스로 역량과 책임성을 키워야 한다.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안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지식과 정보화, 다원적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해 지방자치의 지향점을 정해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은 ‘자립적 발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고, 지역 스스로가 경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통일하고 혁신 역량을 집결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기에다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는 핵심 성장 동력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 지방자치 회의론 나와
자치단체, 이럴 때일수록 책임성 강화해야
지역 발전 핵심 성장 동력 스스로 찾을 때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조차도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관리할 권한, 즉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내 살림을 위해 징수를 하겠다는데도 자체적인 세목 신설을 불허하고 있다.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이 같은 족쇄가 풀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지방자치는 어렵다.

江原日報

2023 08 29 ()

/ 19

동해안 수산물 홍보행사, 소비 촉진 돌파구 되기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도글로벌본부는 지난 25일 양양 남해항 위판장의 대구 4마리, 26일 속초항 위판장의 오징어를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다.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이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동해안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서울에서 수산물 할인특판전 및 소비 촉진 캠페인을 추진, 동해안 수산물의 청정함을 홍보하기로 했다. 9월5일 ‘동해안 청정 수산물 홍보행사’를, 10월 말에는 도내 수협과 수산물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대도시 특판전을 서울에서 각각 개최한다. 도가 동해안 청정 수산물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수산물 안전신뢰도를 높이고 소비 촉진을 이끌어 내는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미 수산업계 종사자들은 위기에 처했다. 최근 들어서는 굶어 죽을 처지에 놓였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힘들게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에서 애써 길러도 팔리

질 않고 판로가 막혀 막막하다는 것이다. 여름철 특수를 기대했던 동해안 일대 횡집 업주 대부분도 되레 급락한 매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폐업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오염수 방류가 초래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널리 확산된 영향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이 된 만큼 피해 어민들과 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최근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오염수 방류를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는 성명까지 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정부가 식회, 직거래 장터 같은 대대적인 소비 촉진 운동을 벌이면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과 상인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 등이다. 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오염수 상황을 엄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해 불안 심리를 덜어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야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수산물 안전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과 실효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9 ()

/ 19

문화시설 협약해놓고 5년째 무소식이라니

-도종축장부지 개발 약속, 시군의장협 오페라하우스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옛 종축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기로 한 공공협약이 올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넘겨져, 이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18개 시군의회의장들로 결성된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강원오페라하우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앞서 7월에는 이·통장연합중앙회 도지부에서 성명을 통해 4년 전 도·원주시·도개발공사 3개 기관이 약속한 복합문화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내 무려 6만㎡의 너른 땅을 폐기하다시피 방치해 온 무책임한 도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원주지역을 넘어 도단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결의를 통해 “2019년 도와 원주시, 도개발공사의 복합문화시설 건립 협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심속에 황량한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6만㎡ 규모의 원주 옛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 도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든든한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지가 소재한 원주시의회 이재용의장은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 문화적 부분에서도 큰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에 강원오페라하우스 조속한 건

립을 요구하는 성명은 이미 두달여 전부터 원주지역 사회단체에서 연일 내놓는 성명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 이름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최근 도차원으로까지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문제가 확산된 것은 2024년도 국비사업으로 확보되지 않는 등 협약 이행에 대한 도정 의지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지자체와 공공이 대단위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철석같이 협약까지 하고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원주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의 이동이 이뤄졌습니다. 기존 수도권에서 누려온 부문 중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향유입니다. 이번에 결의문을 내놓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도내 부족한 정주여건으로 ‘문화시설’을 공통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원주도심의 대단위 종축장 부지를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문화시설 조성으로 결정한 정책적 배경입니다. 도정과 원주시정에 대한 신뢰 저하와 책임 회피로 읽히지 않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추진 결실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